

제13회 감정평가사1차 기출문제(2002.7.7일 시행)

民法

1. 일정한 자가 법인의 사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음 중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야기시킬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
가. 이사 나. 임시이사
다. 특별대리인 라. 이사의 대리인
마. 청산인
2. 다음 법률행위 중 행위 당시에 처분권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은?
가. 교환계약의 체결 나. 저당권의 설정
다. 질권의 설정 라. 채권의 양도
마. 채무의 면제
3. 다음 등기의 분류 중 종국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예고등기 나. 변경등기
다. 회복등기 라. 기입등기
마. 경정등기
4.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저당권의 목적물인 산림상의 수목이 통상의 용법을 넘어 무단으로 벌채된 경우에도 산림의 저당권자는 수목의 반출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이라도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었던 과실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 제3자가 저당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잔존가액이 피담보채권의 담보로서 충분해도 저당권자는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채무자가 저당목적물인 부동산을 훼손한 경우,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마.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그 토지의 지상권자가 심은 임목경도 미친다.
5. 가등기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가등기담보에는 그 성질상 물상대위성은 없다.
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다. 근가등기담보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라. 가등기담보권은 독립해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마. 가등기담보는 반드시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음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6.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학설이 대립되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 물건에 관여되어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유치권에 있어서의 점유는 직접점유이어야 한다.
다. 유치권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 라.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은 상환청구권의 기한의 허여가 인정된 때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7.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학설이 대립되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계속되고 불표현된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나. 지역권도 독립한 1개의 물권으로서 단독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와 승역지의 소유자간에서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는 없으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마.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 없다.
8.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학설이 대립되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그 요소가 아니다.
나.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마. 지상권자가 토지에 필요비용을 지출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해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9. 시효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학설이 대립되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자기소유물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나.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다. 점유매개자를 통한 간접점유자의 시효취득도 가능하다.
라.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前主 명의의 등기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마.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선의·무과실은 점유개시 때에만 요구된다.
1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자대위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나. 불가항력에 의해 방해가 생긴 경우에는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없다.
다. 물권적 청구권은 하나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
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반드시 수반한다.
마. 담보물권에 기해서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수산업법 등에 의하여 어획이 금지된 경우에도 선정은 성립한다.
나. 매장물발견에 있어 매장물은 부동산은 제외된다.
다.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상 가공자가 취득한다.
라. 국유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3회 감정평가사1차 기출문제(2002.7.7일 시행)

라.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과 보충을 위한 하나의 수단 내지 착안점이 될 뿐이며, 관습법과 같이 보편적 구속력을 지닌 법규범이 아니다.
마. 商事에 관하여는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한다.

22.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태아의 권리능력과 관련하여 해제조전설은 태아가 산된 경우에 태아를 보다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 태아의 권리능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이른바 정지조전설을 취하고 있다.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상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라.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상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마. 유증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상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23. 무능력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나. 격지자 甲·乙간에 甲의 청약에 대해 乙이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후 도달 전에 甲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甲은 그 청약을 취소할 수 없다.
다. 미성년자 甲이 그 소유의 자전거를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선의·무과실의 乙에게 매각하고 인도한 경우, 甲의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해도 乙은 그 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성년에 달해 대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남편이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의 처는 20세에 달하지 않으면 후견인이 될 수 없다.

24. 실종선고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실종선고로 인하여 선거권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나. 실종선고의 효과는 선고절차에 참가한 자와의 관계에서만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게 속한 재산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실종선고와 실종선고취소에 있어서 공시최고는 공통된 요건이다.
마. 부재자의 채권자도 그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25. '사단법인의 사원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족수'와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를 위하여 요구되는 정족수'를 차례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1/5 이상, 3/4 이상 나. 1/4 이상, 2/3 이상
다. 1/3 이상, 과반수 라. 과반수, 과반수
마. 1/4 이상, 과반수

26. 재단법인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나.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다.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재단법인이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설립등기를 한 때이다.

라.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불능은 재단법인의 해산사유이므로 정관을 변경하여 존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있을 수 없다.

27. 주물·종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학설이 대립되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종물은 독립된 물건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동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나. 주유소와 주유기는 주물·종물관계에 있다.
다. 백화점 건물과 그 지하층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는 주물·종물관계에 있다.
라.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 이후 설치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28. 법률규정의 강행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가.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4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간의 특약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 지상권자가 그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의 합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다.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자는 계약기간 갱신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의 합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라.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마. 첨부로 인한 물건의 소유권변동에 있어서 첨부물의 소유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과 다른 합의는 유효하다.

29. 다음 가운데 법률행위의 목적이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은?

가. 대상청구권 나. 계약체결상의 과실
다. 위험부담 라. 전보배상책임
마. 계약의 해제

30. 다음 중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가.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전득한 자
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다.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라.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마.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3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제13회 감정평가사1차 기출문제(2002.7.7일 시행)

가.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불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하나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불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당사자 일방의 공박·경솔·무경험은 이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 중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공박·경솔·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공박·경솔·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공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3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학설이 대립되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 이외에 불법행위의 성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동시에 착오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표의자는 그 가운데 어느 쪽이든 그 요건을 입증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라.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압적 수단이 사용된 경우 강박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마. 상대방의 피용자가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기망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3. 대리에 관한 다음 ①에서 ⑤까지의 설명 중 어디에도 관계가 없는 사항은 어느 것인가?

- ① 甲의 대리인 乙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甲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
- ② 甲으로부터 건물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
- ③ 甲의 대리인 乙이 甲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각하였다.
- ④ 미성년자 甲의 부모가 甲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
- ⑤ 甲의 대리인 乙로부터 선임된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

- 가. 법정대리 나. 복대리
- 다. 무권대리 라. 쌍방대리
- 마. 공동대리

34. 쌍방대리·자기계약금지의 예외로 허용되는 것은?

- 가. 대물변제
- 나. 선택채무의 이행

- 다. 부동산 이전등기의 신청
- 라. 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
- 마. 기한미도래의 채무의 변제

35.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는 추인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다.

다.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대하여 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전득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라. 무능력자 자신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특칙이 있다.

36. 다음 중 소급효가 없는 것은?

가. 선택채권에 있어서의 선택

나. 소멸시효의 완성

다. 상속재산의 분할

라. 금치산자의 법률행위의 취소

마. 미성년자의 영업허락의 취소

37.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학설이 대립되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허가 이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그 협력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에 선행하여 이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마. 허가신청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정액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유효하다.

38. 조건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나.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라.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속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마.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3회 감정평가사1차 기출문제(2002.7.7일 시행)

39.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응소하여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승소하게 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 나.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는 파면 후의 보수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재판상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가 각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마. 채권자를 위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때에는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40. 다음 중 독립적으로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 가. 상린권 나. 유치권
다. 지역권 라. 점유권
마. 질권

經濟原論

1. 수요, 공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가격은 증가한다.
- 나. 공급의 변화란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을 말한다.
- 다. 수박 값이 오르면 대체재인 참외의 수요는 증가한다.
- 라. 수요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전적인 욕망이다.
- 마. 소득이 증가하면 상품수요곡선은 항상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2. 재화 X와 Y가 서로 수요측면의 대체재라고 하자. Y재화의 공급이 감소하여 Y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 가. X재의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하락한다.
나. X재의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다. X재의 가격은 상승하나 거래량은 감소한다.
라. X재의 가격은 하락하나 거래량은 증가한다.
마. X재에 대한 가격은 변화하지 않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3. 김사장은 새로운 슈퍼마켓을 개점하였다. 건물 임대료로 매월 5백만원, 종업원 두 명의 임금으로 매월 300만원을 지출한다. 또한 상품구매를 위해 자기 돈 500만원과 은행 돈 500만원을 사용하였다. 상품이 팔리면 그 판매대금으로 은행에 갚을 예정이다. 은행의 대출 및 예금이자율은 월 1%이다. 김사장은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관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김사장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취직해서 일한다면 매달 500만원의 소득을 벌 수 있다고 한다. 김사장이 이 사업을 하는데 들이는 매달의 경제학적 비용은 얼마인가?

- 가. 800만원 나. 810만원
다. 1,300만원 라. 1,310만원
마. 2,300만원

4. 어떤 사람이 자신의 총소득 20,000원으로 다음 표에서와 같이 김밥과 라면을 소비한다고 한다. 효용극대화를 위해서 이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은?

	가격	구매량	총효용	한계효용
김밥	1,000원	14	500	30
라면	500원	12	1,000	20

- 가. 김밥을 덜 소비하고 라면을 더 소비해야 한다.
나. 김밥을 현재와 같이 소비하고 라면을 더 소비해야 한다.
다. 김밥을 더 소비하고 라면을 현재와 같이 소비해야 한다.
라. 김밥을 더 소비하고 라면을 덜 소비해야 한다.
마. 현재 효용이 극대화되고 있으므로 소비를 변화시킬 필요 없다.

5. 탄력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가정할 것)

- 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클 때 가격이 하락하면
가계의 총지출액은 증가한다.
- 나. 어떤 상품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5이고 소득탄력성이
1이라고 가정하고 그 상품의 가격이 10% 증가하였을
때 상품소비량이 종전과 동일하였다면 소득은 5% 증
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다. A재화에 대한 시장가격이 P라고 하고 수요함수가
 $Q^d = -2P + 7$, 공급함수가 $Q^s = 3P + 2$ 라고 할 때 균형점
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이다.
- 라. 어떤 상품의 가격이 30원에서 20원으로 감소할 때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100개에서 300개로 늘었다
면 이 상품수요의 가격탄력성(호탄력성)은 2.5이다.
- 마. 어떤 상품에 대한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우하
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진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면 균형가격은 증가한다.

6. 다음 중 X재 공급자에게 정부가 종량세를 부과하였을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아래의 탄력성은 가격탄력성을 의미함.)

- 가. X재에 대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종량세는 모두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 나. X재에 대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면 종량세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 다. X재에 대한 수요가 완전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면 종량세는 모두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 라. X재에 대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할 때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 마. X재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부담은 커지고 공급자 부담은 작아진다.

7.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을 때 가변생산요소의 투입이 한 단위 더 증가하면?

제13회 감정평가사1차 기출문제(2002.7.7일 시행)

- 다. 총생산물은 반드시 감소한다.
나. 평균생산물은 반드시 감소하지만 총생산물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다. 한계생산물은 반드시 감소하지만 총생산물과 평균생산물은 반드시 증가한다.
라. 한계생산물은 반드시 감소하지만 총생산물과 평균생산물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마. 한계생산물이 마이너스가 된다.

8. 어떤 회사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가격이 1000만원, 한계비용 1000만원, 평균비용이 1100만원, 최소평균가변비용이 900만원이라 한다.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은?
가. 이 회사는 생산을 증가시켜서 더욱 더 큰 이익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
나. 이 회사는 초과이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도 된다.
다. 이 회사는 현재 손실을 보고 있으나 생산을 계속하여야 한다.
라. 이 회사는 현재 손익분기점에 있으므로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마. 이 회사는 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생산을 중단하여야 한다.

9. 노동의 한계생산물을 MP_L , 자본의 한계생산물을 MP_K , 노동에 대한 단위당 가격(임금)을 w , 자본의 단위당 가격(이자율)을 r 이라 하자. 주어진 노동량과 자본량하에서 $\frac{MP_L}{MP_K} < \frac{w}{r}$ 라고 한다면 완전경쟁기업이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은?
가. 노동투입량을 증가시키고 자본투입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나. 노동투입량을 감소시키고 자본투입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다. 노동투입량을 감소시키고 자본투입량도 감소시켜야 한다.
라. 노동투입량을 증가시키고 자본투입량도 증가시켜야 한다.
마. 노동투입량은 증가시키고 자본투입량은 고정해야 한다.

10. 완전경쟁시장에서 각 기업의 비용함수가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 : $C=100Q$. (여기서 C는 총비용을 Q는 생산량을 표시한다.) 이 시장에서 장기균형가격은 얼마인가?
가. 50 나. 100
다. 150 라. 200
마. 250

11. 생산물시장에서의 독점인 어떤 기업이 완전경쟁인 요소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이 기업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은?
가. 한계수입생산물(Marginal Revenue Product : MRP)보다 높은 요소가격을 지불한다.
나. 한계수입생산물(MRP)보다 낮은 요소가격을 지불한다.
다. 한계생산물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 VMP)보다 높은 요소가격을 지불한다.
라. 한계생산물가치(VMP)보다 낮은 요소가격을 지불한다.
마. 한계생산물가치(VMP)와 동일한 요소가격을 지불한다.

12.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 프로그램을 생산하는데 고정비용으로 1억불을 투입한다. 가변비용은 일정하여 한 장당 50센트라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가.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한다.
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완전경쟁적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라. 과점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마. 독점적 경쟁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13. 다음의 독점시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장기균형에서 독점기업은 동일한 비용조건의 완전경쟁기업보다 생산량이 적다.
나. 생산과정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독점이 나타날 수 있다.
다. 독점시장의 수요함수가 $P=10-2Q$ 이고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이 2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2로 결정해야 한다.
라. 독점기업의 상품의 공급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 시장간의 상품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동일하면 독점기업은 가격차별을 할 수 없다.

14. 다음 중 독점적 경쟁기업이 장기적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가. 과잉설비 보유 나. 기업들간의 가격 경쟁
다. 진입장벽의 부재 라. 과도한 광고
마. 차별화된 재화의 생산

15. 어느 상품시장에서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는 경우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정하시오.)
가. 시장균형가격 이하로 최고가격이 설정되어야 효과가 있다.
나. 최고가격에서는 초과수요가 존재한다.
다. 시장균형가격 이상으로 지불해서라도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라. 생산자잉여가 감소하나 소비자잉여는 증가한다.
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임대료규제는 최고가격제의 일환이다.

16. 다음 중 가격차별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가. 수출품의 가격과 내수품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
나.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시 할인.
다. 전력회사에서 전력사용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은 가격 적용.
라. 노인들에게 극장표 할인.
마. 선착순 판매.

17. 다음의 소득분배에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13회 감정평가사1차 기출문제(2002.7.7일 시행)

- 가. 10분위분배율의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더 불균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나.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더 불균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 소득분배의 불균등도가 높을수록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의 아래로 더 늘어지는 형태가 된다.
- 라. 지니계수는 기수적인 평가방법이다.
- 마. 엡켄스지수가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더 불균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8. 다음의 파레토최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사회내의 어떤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 다른 사람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없는 실현가능한 배분상태를 파레토최적이라고 한다.
- 나. 교환에 대한 계약곡선이란 교환의 파레토최적을 만족시키는 점을 연결한 선이다.
- 다. 사회에 두 사람만이 존재하고 두 상품만이 존재할 때 이 두 사람의 두 상품에 대한 한계대체율이 같으면 교환의 파레토최적을 달성한다.
- 라.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균형은 파레토최적이다.
- 마. 파레토최적의 개념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equity)을 모두 의미한다.
19. 외부성에 관한 사실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높은 재화는 시장에서 과소생산된다.
- 나. 외부부제가 있는 재화는 시장에서 과소생산된다.
- 다. 외부비용이 있는 재화의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크다.
- 라. 외부부제가 있는 재화의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크다.
- 마.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높은 재화는 시장에서 과잉생산된다.
20.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curve)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경우에, 한 재화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그 재화의 기회비용은?
- 가. 점점 증가한다.
- 나. 점점 감소한다.
- 다. 처음에는 증가하지만 나중에는 감소한다.
- 라. 처음에는 감소하지만 나중에는 증가한다.
- 마.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한다.
21. A국가와 B국가가 무역이전의 X재와 Y재에 대한 단위당 생산비가 다음과 같다면 두 나라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조건(P_X/P_Y)은?

	X재	Y재
A국	3	9
B국	5	10

- 가. 0.1 나. 0.2

- 다. 0.4
마. 0.7

22. 다음 중 GDP계정에서 총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가계의 새로운 주택의 구입
나. 재고의 증가
다. 기업의 새로운 공장건물의 건설
라. 기업의 새로운 기계의 구입
마. 가계의 주식의 매입

23. 1980년과 1990년 사이에 경상GDP가 200조원에서 450조원으로 증가하고 GDP디플레이터(deflator)는 100에서 150으로 상승하였다면 이 기간 동안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가. 250%
나. 150%
다. 125%
라. 50%
마. 25%

24. 실업률은 $\frac{\text{실업자수}}{(\quad)}$ 일 때 ()속에 들어갈 경제변수는?
가. 총인구
나. 15세 이상의 인구
다. 경제활동인구
라. 비경제활동인구
마. 취업자수

25. 주어진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독립투자수요를 얼마만큼 증가시키면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Y^F)을 달성할 수 있는가?

$$Y^D = C + I^D \text{ (총수요)}, C = 200 + 0.9Y \text{ (소비수요)}, I^D = 150 \text{ (투자수요)}$$

$$YD = Y \text{ (균형조건)}, YF = 4,500 \text{ (완전고용국민소득)}$$
 가. 50
나. 100
다. 150
라. 200
마. 320

26. 정부지출과 조세가 같은 액수만큼 증가했을 경우 경제의 변화는?
가. 누출이 주입과 동일한 액수만큼 증가했으므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나. 조세증가로 인한 소비지출의 감소는 정부지출액이 가지는 효과보다 크므로 국민소득이 감소한다.
다. 조세는 국민 소득에 마이너스의 효과를 주므로 국민 소득은 감소한다.
라. 이런 경우 국민소득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마. 정부지출의 증가액은 그 전체가 주입이지만 조세의 일부는 저축으로부터의 누출이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27.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고전학파모형에 따르면 구축효과는 국공채발행의 경우에는 나타나지만 조세정책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나. 구축효과는 재정정책에 대응하는 이자율의 변동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제13회 감정평가사1차 기출문제(2002.7.7일 시행)

다. 사회보장이전지출은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에 속한다.
라.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된 케인즈단순모형에서 정부 지출증수와 투자증수는 동일하다.

마. 케인즈의 재량적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변화시킴으로써 국민소득을 변화시키는 총수요관리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28. 경제전체의 한계저축성향이 0.2일 때, 정부지출이 10억원 증가하면 LM곡선은?

- 가. 2억원만큼 우측으로 이동한다.
- 나. 2억원만큼 좌측으로 이동한다.
- 다. 이동하지 않는다.
- 라. 50억원만큼 좌측으로 이동한다.
- 마. 50억원만큼 우측으로 이동한다.

29. 다음 중 직접적으로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가. 물가 하락
- 나. 노동공급 증가
- 다. 원유,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
- 라. 노동생산성 향상
- 마. 기술진보

30. 어떤 사람에게 백만원짜리 복권이 당첨되었을 경우, 항상 소득가설에 의하면 이 사람의 평균저축성향은 어떻게 되겠는가?

- 가. 감소한다.
- 나. 증가한다.
- 다.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 라.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 마. 변하지 않는다.

31. 다음 중 총통화 M2에 속하지 않는 것은?

- 가. 민간이 보유한 현금 나. 민간은행이 보유한 현금
- 다. 기업의 당좌예금 라. 민간의 정기예금
- 마. 민간의 자유저축예금

32.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다음 여러 가지 통화정책의 조합 중에서 가장 긴축성이 강한 것은?

- 가. 공개시장매출, 지급준비율 인상, 재할인율 인상
- 나. 공개시장매출, 지급준비율 인상, 재할인율 인하
- 다. 공개시장매출, 지급준비율 인하, 재할인율 인상
- 라. 공개시장매입, 지급준비율 인상, 재할인율 인상
- 마. 공개시장매입, 지급준비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

33.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15% 증가, 실질국민소득이 8% 증가, 물가가 5% 증가하였다면, 화폐의 유통속도의 변화율은 대략 얼마인가?

- 가. -12% 나. -2%
- 다. 2% 라. 12%
- 마. 18%

34. 화폐금융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경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 가. 화폐공급량이 증가하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한다.
- 나. 화폐공급량이 증가하면 주식가격이 상승하고 투자가 촉진된다.
- 다. 화폐공급량이 증가하면 민간의 자산 증가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 라. 화폐공급량이 감소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 마. 화폐공급량이 감소하면 기업은 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신규투자를 축소한다.

35.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감소시키고, 정부가 세율을 인하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을 가정하시오.)

- 가. 이자율이 상승하고, 실업이 감소한다.
- 나. 이자율이 상승하고, 실업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 다. 이자율이 하락하고, 실업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 라. 이자율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으며, 실업은 감소한다.
- 마. 이자율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으며, 실업은 증가한다.

36. 다음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을 가정하시오.)

- 가.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화폐의 실질가치가 하락한다.
- 나. 정부지출 확대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을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 다.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나타난 인플레이션을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 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생산증가를 동반한다.
- 마.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은 고용증가를 동반한다.

37. 다음 중 새고전학파(new classical school)의 주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에 입각하여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 나. 예상된 총수요관리정책은 단기에도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다. 예상치 못한 총수요관리정책도 단기에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라. 예상된 총수요관리정책은 단기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 마. 예상치 못한 총수요관리정책도 단기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38. 다음 중 경상거래에 속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우리나라 H기업의 중형자동차 수출
- 나.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K군의 미국 D회사에서 받은 임금
- 다. 미국 국적을 가진 Smith씨가 우리나라 Z기업에서 받은 임금
- 라. 미국 국적을 가진 Zones씨가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

제13회 감정평가사1차 기출문제(2002.7.7일 시행)

한 금액

마.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M군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금

39.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여타 조건이 일정할 때 (지급)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외국제품의 수입증가
- 나.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매입
- 다. 우리나라 거주자의 외국여행 지출비 증가
- 라. 외국투자자의 우리나라 증권투자 감소
- 마.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공장 매각

40. 다음 중 변동환율제도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국제수지 불균형의 신속한 조정 b. 국내경제 안정을 위한 금융통화정책의 자유로운 사용 c. 국제결제상의 불확실성 축소 |
|--|

- 가. a, b
- 나. a, c
- 다. b, c
- 라. c
- 마. a, b, c

不動産關係法規

1. 국토이용계획 등에 필요한 조사·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출입 또는 장애물 변경·제거 등의 행위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바른 것은?

- 가. 손실보상의 방법은 일반 토지수용법리와는 달리 사후 보상이다.
- 나. 손실보상의 절차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일원화 되어 있다.
- 다. 국토이용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타인토지의 출입의 학문적 성격은 공용제한 중 사업제한에 해당한다.
- 라. 손실보상의무자는 손실을 준 자이다.
- 마.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토지수급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가. 토지수급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3년 단위로 수립한다.
-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다.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수급계획에 따른 토지수급현황을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된 토지수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치 않은 것은?

- 가.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의 방목이 금지된다.
- 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취락지구 안에서는 용적률 60%를 초과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다. 개발계획이 수립된 준도시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20%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라. 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을, 보전임지인 경우에는 산림법을 적용한다.
-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다.

4.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 또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나.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성질은 강학상의 특허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다.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후에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거래계약을 한 경우에는 후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마. 허가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징역·벌금 등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았다.

5.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가.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어민이 아닌 자에게는 농지의 거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자기 또는 자기 친족의 주거용 주택용지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을 고려할 필요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할 수 있다.
- 마.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에게는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6. 국토이용관리법 제6장에 규정된 벌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

제13회 감정평가사1차 기출문제(2002.7.7일 시행)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벌금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안에서 새로운 용도시설의 설치행위에 따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용도변경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마.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준도시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획을 확정 또는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야 한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는 준농림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은 준도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는 준도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는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8. 다음 중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 가. 토지분할의 제한
- 나. 토지거래신고제
-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라. 공시지가제도
- 마. 유류지에 대한 규제
9. 공시지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가. 공시지가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건설교통부 장관이 3년마다 공시한다.
- 나. 공시지가를 공시함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라. 정부는 지가공시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마. 건설교통부 장관이 표준지의 선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공시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가.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표준지의 이용상황판정은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언제나 1월 1일이다.
- 다. 표준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라.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설정된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한다.
- 마. 건설교통부 장관은 표준지의 조사·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조사·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1.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 나. 감정평가업자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라. 건설교통부 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표준지의 조사·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조사·평가하게 할 수 있다.
- 마. 건설교통부 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표준지의 조사·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표준지의 조사·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1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준지 지가공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형상과 표준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
- 나.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서면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진다.
- 라.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만 한다.
- 마.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만 한다.
13.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13회 감정평가사1차 기출문제(2002.7.7일 시행)

- 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명백한 오류에 해당한다.
 -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라.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어 정정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 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가.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 나.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2/3 이상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 라.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이어야 한다.
 - 마.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5.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8조는 감정평가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6월을 명할 수 있다.
 -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3월을 명할 수 있다.
 -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20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다.
 -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그 사무소의 명칭에 감정평가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3월을 명할 수 있다.
 -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의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평가방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가. 상품과 원재료의 평가는 복성식평가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 나. 건물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 임목의 평가는 복성식평가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 라. 과수원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 마. 건설기계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척이다.

17.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가. 도시계획구역안의 지상·수상·공중·수중 및 지하에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만 한다.
- 나. 도시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 그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다.
- 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해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라도, 이미 별도로 가설된 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 라. 광역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지만 광역시설의 설치에는 일반 도시계획시설과는 달리 별도 법률에 의해 관계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한다.
- 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당해 광역시설의 설치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18. 도시계획의 폐지·변경 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 나.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대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 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경우
- 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19.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일정한 조건이 구비된 경우 건축제한을 완화적용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가. 건폐율 나. 용적률
- 다. 주차장설치기준 라. 건축물의 높이제한
- 마. 미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20. 도시계획법 제5장에 규정된 개발행위의 허가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가. 도시계획구역안의 산림에서 임도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나. 개발행위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조건과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다. 광역시장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미관이 크게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제13회 감정평가사1차 기출문제(2002.7.7일 시행)

광역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4년간 개발행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라. 광역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절대로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1. 도시계획법상의 각종 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작물의 이전명령을 받은 자가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토지를 승계한 자가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공작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나. 법인의 종업원이 도시계획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여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그 종업원이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같은 법규정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과한다.

다. 행정청이 도시계획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으나, 허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한 자에게는 허가취소에 따른 철거 등 불이익 조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라. 행정청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이전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 중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22.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가. 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당해 도시계획구역에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다.

나. 주민은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된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 주민으로부터 도시계획입안을 제안받은 도시계획입안권자는 제안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시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도시계획입안권자는 주민의 제안을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마. 도시계획입안시에 작성하는 도시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축척 1만분의 1의 지형도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3.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광역도시권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나. 광역도시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

립한다.

다.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4. 도시계획의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도시계획결정은 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 행정심판제기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해관계인이 도시계획결정의 고시를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라.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해 새로이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마.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25.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가. 사인이 국가에 재산을 기부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나. 국가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권은 당연 소멸한다.

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그가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국가가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취득일로부터 10년간은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마. 국유재산을 등기함에 있어서 그 관리자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6. 국유 잡종재산의 관리·처분기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가. 관리·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처분한다.

나. 선박 및 항공기와 그 종물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처분한다.

다. 공항·항만 또는 공업단지 내의 재산으로서 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처분한다.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 또는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속하는 재산은 총괄청이 직접 관리·처분한다.

마.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의 경우 총괄청이 그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리·처분하도록 지정한 재산에 한하여 관리청이 직접 관리·처분한다.

제13회 감정평가사1차 기출문제(2002.7.7일 시행)

- 라.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의 규정에 따른 높이산정에 있어서 전면도로가 대지의 지표면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표지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마. 굴뚝의 옥상돌출부는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2. 지하층에 관한 건축법령상의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가. 용적률을 산정하는 때에 연면적으로는 기계실 또는 주차장을 제외한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하여 산정한다.
- 나.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지하층에 포함된 기계실과 주차장면적은 제외된다.
- 다. 업무시설의 경우 지하층이라 함은 지표면 이하에 평균적으로 3분의2 이상이 묻힌 층을 말한다.
- 라.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500제곱미터인 때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부분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지하층의 바닥면적(거실을 말한다)이 500제곱미터인 층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한다.
- 나.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및 소유권 지분 등을 등록한다.
- 다. 도면에는 지번·지목·경계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등을 등록한다.
- 라. 공유자연명부에는 지번 및 소유권 지분 등을 등록한다.
- 마.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지목·좌표 및 면적을 등록한다.
34. 지적도와 임야도에 지목을 부호로 표기하는 방법 중 옳은 것은?
- 가. 답 → 논 나. 주유소용지 → 주
- 다. 공원 → 원 라. 목장용지 → 장
- 마. 하천 → 하
35.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가.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나.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다. 축척변경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라.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마.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36. 지적법에서 정한 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제13회 감정평가사1차 기출문제(2002.7.7일 시행)

은?

- 가.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소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라. 합병신청을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마. 등록전환신청을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7.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정해진다.
- 나. 갑구에서 한 등기 사이의 전후 또는 을구에서 한 등기 사이의 전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 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 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마. 구분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38.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절차에 대한 기술로서 가장 틀린 것은?

- 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 나. 등기는 반드시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관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라.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39. 등기관이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 경우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사건이 해당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 나.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다. 모든 등기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 라.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마.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40. 부동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가.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관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 나. 등기부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 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라.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등기는 등기관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서에는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마.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